

집중 호우·태풍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북도, 재난지원금 등 514억·공공시설 복구비 1008억원 투입키로

전북도는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누' 피해에 따른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장마기간 동안 도내 평균 889mm, 익산 함라 지역에 1,019mm, 순창 풍산 지역에 1,004mm의 강수량을 보였으며,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내린 강수량(429mm)은 연평균 강수량(1,326mm)의 1/3(32%)에 해당하는 강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다.

도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514억원(호우 500, 태풍 14), 공공시설 복구비 1,008억원(호우 1,008) 등 총 1,522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호우로 인한 도·시·군·중·영 합동 피해 조사 결과 7개 시군(군산·익산·남원·김제·완주·고창·부안)은 우심지역(국비지원)으로 선정됐으며, 6개 시군(익산·김제·완주·군산·서수면·고창·공음면·대신면·부안·보안면·진서면·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라 복구비 약 153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도비 부담분(74억 원)은 예비비를 활용해 추석전까지 지급하고, 국비(361억)는 행안부 등과 협의해 시군 협조하에 주생계수단 확인, 추경 성집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신속히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장마기간 동안 호우로 인해 발생한 433건의 공공시설은 전체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예비비 활용 및 내년도 본예산 등에 복구비를 확보해

결정한 정부 정책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을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기스 요금 감면 등이 추가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도비 부담분(74억 원)은 예비비를 활용해 추석전까지 지급하고, 국비(361억)는 행안부 등과 협의해 시군 협조하에 주생계수단 확인, 추경 성집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신속히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장마기간 동안 호우로 인해 발생한 433건의 공공시설은 전체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예비비 활용 및 내년도 본예산 등에 복구비를 확보해

조속히 착공하고, 재해 취약 지역에 찰 강화 및 내년도 우기장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민관을 기합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기능 복원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원적인 피해 발생 원인을 개선하는 개선복구사업 3개 시군(익산·완주·부안)이 선정(복구비 288억)됐으며 행안부로부터 응급복구비 40억원의 응급 복구비를 확보해 2차 피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동우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호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0월 15일까지) 종료시까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선관위, 총선 대비 모의개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개표관리를 위해 지난 15~20일 총 3회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모의개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개표는 투표함 접수,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접계 등 개표 전과정에 대한 교육 및 개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등 불발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지난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35개 정당의 참여로 투표지 가 역대 최장인 48.1cm를 기록해 수작업으로 개표했던 상황이 제22대 국회 의원선거에서도 반복될 수 있어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작업 분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과적인 개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모의개표와 더불어 10월까지 15개 구·시·군선관위별로 위원회 실정에 맞는 모의개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직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모의개표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무결한 개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임승식·염영선 의원, 시무처 직원들은 20일 정읍 삼고을시장에서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벌였다.

도의회, 추석 전통시장 장보기·복지시설 위문

전통시장 현안 등 의견 청취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2)과 임승식(정읍1)·염영선(정읍2) 의원, 시무처 직원들은 20일 정읍 삼고을시장에서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벌였다.

의원과 시무처 직원들은 이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유

통망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는 등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의원들은 정읍 삼고을시장 이홍구 상인회 회장 등을 만나 전통시장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의원들은 시장에서 과일과 육류 등 명절 성수품을 구입해 젊음자역 노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4곳에

전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도민들께 추석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벌였다"며 "전통시장마다 특화사업을 벌이는 민족 경쟁력을 가지고 활성화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승식·염영선 의원은 "이번 추석에는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종전 주장이 반국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

이낙연 전 총리, 목포대서 '대한민국생존전략' 강연

"DJ자체로 돌아가야"

尹정부 동맹 일변도

이념외교 직격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0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내 70주년 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화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반도체 기초 기술 협력 강화, 생산시설 대미 투자를 추진하여 '대중 수출은 맡겨둘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 총리는 지정학적 위치·구조에 따른 우리나라의 운명을 △분단국가 △동맹국가 △반도국가 △통상국가 등으로 규정했다.

분단국가에 대해서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3년 이상 전쟁을 하고 70년 동안 휴전했다.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확보·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분단된 체 평화를 유지하자는 주장은 '온전한 평화'가 될 수 없어 한계가 있다. 결국 경쟁하고 싸울 것"이라면서 통일 전제·평화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동맹국가일 수밖에 없다. 세계 최강국 미국과 유일하게 동맹을 맺은 덕분에 안보를 이민족이나 유지할 수 있었다. 동맹으로서 공유했던 민주주의, 인권, 다양성 포용 등의 가치는 계속 추구해야 한다"며 계승·발전을 강조했다.

미국의 반도체 대중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안보에서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것은 대전제다"면서도 "수출의 20%가 반도체, 반도체 수출의 60%를 중국·홍콩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이익 극대화를 강조했다.

/뉴스

완주군의회
Wanju County Council

